

**【제22대 총선 공약】 “기후위기·고물가시대, 농산물가격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”**

공약	주요 추진 과제
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(적정 가격안정대 유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비자 보호대책 (가격 급등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후물가 쿠폰제, 해외공급망 확보(국내생산부족시), 유통업체 가격인하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생산자 보호대책 (가격 폭락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가손실보전제도입(차액보전), 수매비축, 출하정지명령</li> </ul> </li> </ul>
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(안정적 공급망 확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물량 비중 50%로 확대</li> <li>•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(산지조직·농가 손실보전)</li> <li>• 수매비축 사업 확대 및 사전적 수급안정 장치 강화</li> <li>•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육성</li> <li>• 품목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운영권 단계적 부여</li> </ul>
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(국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량주권특별법 제정(자급목표, 농지 및 예산확보)</li> <li>•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</li> <li>•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지원</li> <li>• 탄소중립직불제, 경축순환직불제 도입</li> <li>•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,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</li> <li>• 농촌 고용인력 공급 확대 국가 책임 강화</li> </ul>
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</li> <li>•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 지원</li> <li>•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,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</li> <li>• 유전자변형식품(GMO) 완전 표시제 도입</li> </ul>

□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·고물가시대, 농산물가격안정 및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**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적정 가격안정대를 유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.**

- ① 가격급등시 ‘기후물가쿠폰제’\*, 선제적 해외 공급망 확보(국내생산부족시), 유통업체 가격인하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
  - \* 기후물가 쿠폰제 :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및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공
- ② 가격폭락시 ‘농가손실보전제도’\* 도입, 수매비축 및 출하정지명령 등으로 생산자 보호
  - \* 농가손실보전제 : 적정 기준 가격 설정 및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보전
- ③ 적정 가격안정대를 정하고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하여 가격 급등 및 폭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제도화

**②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등 안정적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반드시 안정화하겠습니다.**

- ①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을 전체 재배물량의 50%로 대폭 확대
- ② 계약재배 이행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산지조직 및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‘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’ 도입
- ③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위해 수매비축 사업 및 사전적 수급안정 장치를 확대
- ④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육성,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등 농산물 생산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
- ⑤ 산지-소비자 온라인 거래 확대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산지의 가격교섭력 확보

**③ 농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식량자급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.**

- ①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
  - 자급목표 명시,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
- ②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(‘22년 4.5%) 확대(‘30년 20%)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
  -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
- ③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
  - 탄소 중립, 환경 친화적 축산업(소, 돼지, 닭 등)으로의 전환 및 육성 지원
- ④ 탄소중립직불제·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
  -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, 경종농업과 축산업간 자원순환 촉진

- ⑤ 생산비 급등에 따른 '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' 도입
  - 유류비·농사용전기료, 비료·사료비 등 생산비 급등에 따른 가격인상분 지원
- ⑥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'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' 도입
  - 피해복구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, 재해보험 보상범위·보상률 강화, 비보험 작물피해보전, (가)농식품기후대응기금 도입
- ⑦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
  -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 설립, 공공형계절근로자제 확대, 근로환경 개선(교통비·보험료·숙박비 등)

#### ④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.

- ①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
  -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, (가)국가먹거리위원회 신설, 취약계층·어르신·1인가구 등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
- ②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 지원
  -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 및 단가 인상
  -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(지역화폐) 제공
- ③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, 초동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
  -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사업 복원 및 확대
- ④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'긴급끼니 돌봄제도' 도입
- ⑤ 유전자변형식품(GMO)완전 표시제 도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법 개정
  - 소비자의 알권리·선택권 보장 위해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
  -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등 법개정

□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안정의 기본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4. 03. 14.

더불어  
**민주당**

**정책위원회 의장 이 개 호**